

일본 역사왜곡 교과서 문부성 검정 통과할듯

2차대전 침략 미화...“자민당서 합격 판정 압력”

【도쿄=한승동 특파원】 2차세계대전 때 일본의 아시아 침략을 '아시아 민족해방전쟁'이자 '자위를 위한 전쟁'으로 미화하고 가해자 일본을 철저히 피해자로 묘사하는 등 기존의 일본 및 세계 역사를 뒤집어놓은 역사교과서가 일본 문부성 검정 과정을 곧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3면

8일 <한겨레>가 입수한 이 교과서 사본은 아시아지역 항일전쟁을 “구미 식민지 지배하에서 이익을 얻고 있던 자들”에 의한 폭주각시 “계략과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교과서는 이른바 자유주의사관을 신봉하는 일본 우익인사들의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회'가 지난 4월 문부성에 검정 신청한 중학교 사회과 역사교과서다.

이 교과서의 검정 과정에 정통한 관계자는 “집권 자민당이 검정 합격판정을 내리도록 문부성에 압력을 가하고 있고 문부성도 합격시키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어, 별다른 일이 없는 한 합격판정이 확실하다”고 말했다.

오는 10월 사실상 검정작업을 완료

(검정의견 발표)하고 내년 3월 합·불 합격 최종판정 과정을 거쳐 2002년 4월부터 사용될 이 교과서는 지금까지 태평양전쟁으로 알려진 일본의 2차대전 침략전쟁을 '대동아전쟁'으로 고쳐부르면서 '미국의 대일 적대정책 때문에 불가피했던 자위전쟁'으로 정당화했다.

또 일본군의 동남아 침략을 '진출' '진주' '쾌진격'으로 묘사하고 전쟁 초기 일본군의 승리는 “동남아나 인도인들, 나아가 아프리카인들에게까지 독립을 향한 꿈과 용기”를 키워줬

고 “유럽 식민지였던 국가들의 독립 물결”을 불러일으켜 “2차대전 뒤의 세계지도를 일변시켰다”고 기술했다. 심지어 1960년 유엔총회의 식민지 독립선언 결의마저 일본이 43년 중국 왕자오밍 친일괴뢰정부와 만주국, 동남아 대표 등을 소집해 연 대동아회의 공동선언과 “같은 취지였다”고 주장했다.

교과서는 “전쟁은 선악을 가르긴 어렵다”며 전쟁책임을 일버무린 뒤 일본군의 옥쇄와 가미카제 특공대, 오키나와 주민 대량희생 등을 장렬한 전사로 묘사하면서 일본 국가주의를 자극하고 있다.

또한 원폭, 공습 등에 의한 일본측 피해는 자세히 거론하면서도 일본의 전쟁범죄에 대해서는 “전쟁 때 전쟁범죄를 일질 저지르지 않은 국가는 없었고 물론 일본도 예외는 아니다”고 한마디 언급하는 데 그쳤다. 대신 독일의 유대인 및 폴란드인·러시아인·집시 대량학살과 스탈린·마오쩌둥·폴포트 정권의 집단학살 등은 구체적인 수치까지 들며 장황하게 기술한 뒤 “일본은 독일과 동맹을 맺었지만 인종차별반대라는 국가 방침 아래 유대인을 도왔다”는 점을 강조해 대비시켰다.

sdhan@hani.co.kr

미, 일 전쟁범죄 조사

【로스앤젤레스=연합】 나치 독일의 전쟁범죄에 관한 미국내 자료를 조사·공개하는 미국 정부 전문가그룹이 나치 동맹국이었던 일본의 전범행위 조사를 위해 연방정부 요원 100명 이상을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7일 나치전범기록 관계부처 합동조사단은 나치전범자료 조사가 일단락됨에 따라 지난 5월 일본 전범기록 조사에 착수한 이래 적어도 100명의 연방공무원이 자료 소재 파악과 문서 비밀취급 해제작업에 동원되고 있다고 밝혔다.

합동조사단은 미국 의회가 1998년 10월 제정한 '나치전범공개법'에 의거해 빌 클린턴 대통령이 지난해 1월 백악관국가안보회의·국무부·국방부·법무부·중앙정보국·연방수사국·국립문서보관소 등의 공문서 담당 직원과